

금남로에서



장필수 논설실장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이 개발 사업이 광주시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광주시의 현안 사업이자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복합쇼핑몰과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복합쇼핑몰은 '노점 도시' 광주를 '편(fun)한 도시'로 탈바꿈 시킬 길라잡이 콘텐츠로 지난 대선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5성급 호텔은 광주가 국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시설이다.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전남-일신방직 터 개발 사업이 주목받는 두번째 이유는 광주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두 곳의 방직공장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 유산으로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원도심의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힌다.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광주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 확보 대신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 한 사업으로 남을 수도 있다. 개발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는 방직공장 터 29만 6340㎡(8만 9642평)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와 300실 규모의 49층 특급호텔, 아파트 4186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돈이 되는 아파트 건립을 보장해주면서 시민들의 숙원인 복합쇼핑

은펜칼럼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장

혼자서는 식당을 잘 가지 않는다. 혼자 앉아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먹고, 계산하고 음식점을 나서는 과정이 힘들다. 반찬이 없어도 집에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 식단의 포만보다는 끼니를 대충 때우듯 집밥이 편안하다. 반찬에 대한 몇 가지 추억이 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광주로 왔는데 외할머니가 외숙모의 눈치를 살피며 가져온 한 포기 김장김치를 잊을 수 없다. 비록 끝까지 (결면에 생긴 흰 곰팡이류)가 낀 우거지 같은 배추김치였지만 푸른색 거친 시골 김치를 먹다가 부드러운 살구색의 도회 김치는 촌놈 기죽게 아사했다. 한편은 잠깐 자취를 할 때 콩치국이 먹고 싶어서 서석동 도매기시장이에 들러 콩치 두 마리를 샀다. 어머니는 국을 끓일 때 쌀을 한 번 행군 다음 뽕뽕뽕 문질러서 그 쓰물을 활용했기에 나도 그렇게 따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습관처럼 쓰물을 버려버렸다. 맹물에 콩치를 토막 내어 넣었는데 보기도 멍탕이었다. 순간 피를 냈다. 콩기 대신 밀가루를 풀면 되겠다 싶어 한 숟갈 넣었는데 도통 쓰물 같지 않았다. 몇 숟갈을 넣자

기고



공순환 전 광산중학교 교장 밀양중앙회 감사리빙현대학 감사

최근 들어 신성한 학교에서 교권 침해와 교사를 폭행한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0대 여교사(1학년 담임, 학업부담 담당)가 자살했으며, 8월에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교 2층 교무실에서 40대 교사가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일선 학교에서 어언 40년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애써 온 나는 교장 퇴직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사로부터'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오면서도 한때는 교사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격정도 했었다. 왜냐하면 교사는 인기가 있는 직종이 아니고, 항상 학생의 반사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어느 시대의 전유물이나 포퓰리즘에 의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한 시스템과 교육철학 아래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다. 먼 미래 우리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제1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다.

광주 방직공장 부지 개발 사업, 성공 조건은

물과 호텔을 짓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적정선에서 제한하고 시민들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와 개발 이익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접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뉘뇌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대 관건은 '공공 기여'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지가 상승분의 얼마를 사업자로부터 환수할 것인지이다. 도시계획 변경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공 기여액 범위를 감정평가액 기준 땅값 차액의 40~60%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해 평가액을 산정한 상태 사업자는 최소인 40%를, 광주시는 최대치인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해 6850억 원에 부지를 사들였는데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땅값 추정액을 1조 2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땅값 상승 차액만 5000억 원대인데 사업자는 대략 40%를 적용하면 공공기여액은 2000억 원에 달하지만 광주시 안을 적용하면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양 측이 공공기여액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이이다.

하지만 공공기여액 자체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 차액 중 일부를 지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지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지가 상승분의 절반 가량만 내놓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여액이 결정되면 사업자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내놓을 수도 있다. 여기에 합정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가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기반시설을 공공기여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광주시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부지 내에 35m의 간선도로가 예정돼 있는데 이 도로를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할 경우 사업자는 '평 먹고 알 먹음' 가능성이 크다.

혹시 없었지 모를 사업자의 '떡튀 방지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자치단체들은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때 계약 미이행 방지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을 받는데 광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고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받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도시재생 롤모델 만들어야

부산시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한 롯데월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2000년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롯데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자 지난해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재연장 불허라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롯데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백기 투항하면서 23년만에 지난 17일 기공식을 갖고 착공에 들어갔다. 시간은 허가권자인 광주시의 편이다. 시민들의 숙원인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금만 마음에 사업자가 꺼려가선 안된다. 복합쇼핑몰 건립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원도심 재생의 성공 모델을 이 곳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은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 확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 실행을 위해 협약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아파트와 복합쇼핑몰·호텔을 동시에 완공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문화 하는 것이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광주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이 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광주시의 협심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 반찬으로 전하는 훈훈한 정

희뿌연 뜨물같이 보였다. 그런데 폭 끓이고 보니 콩치국이 아니라 밀가루풀 같은 콩치죽이 되어 버렸다. 거창한 일이 아니지만 한 끼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반찬을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학생의 집을 방문해 온기를 느끼도록 하는 과정이다. 반찬을 들고 조순(祖孫) 가정과 부자(父子) 가정을 방문해 냉랭하고 정리하고 방학 중 아이의 생활도 확인해 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며 복지사분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나도 집 반찬 만들기에 두 번 참여했는데 학생 시절의 반찬 추억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의 교단 현실도 떠올랐다. 절기도 녹이는 폭염(暴炎), 동북댐 식수 걱정을 비웃는 폭우(暴雨), 너를을 장갑처럼 끼고 장갑차가 배치된 거리를 누비는 폭인(暴人), 이 '3폭' 시대에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외침이 주먹마디 가득하다. 이제 교육권, 생활지도권 등 교권도 확대하고 강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와 교사에 해당하지만 관계 개선도 하고,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집 반찬 사업이 거칠게 대립하는 교육 현장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란다.

깨 집기에 담은 모습은 선한 인간의 진면목이었다. 거창한 일이 아니지만 한 끼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반찬을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학생의 집을 방문해 온기를 느끼도록 하는 과정이다. 반찬을 들고 조순(祖孫) 가정과 부자(父子) 가정을 방문해 냉랭하고 정리하고 방학 중 아이의 생활도 확인해 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며 복지사분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나도 집 반찬 만들기에 두 번 참여했는데 학생 시절의 반찬 추억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의 교단 현실도 떠올랐다. 절기도 녹이는 폭염(暴炎), 동북댐 식수 걱정을 비웃는 폭우(暴雨), 너를을 장갑처럼 끼고 장갑차가 배치된 거리를 누비는 폭인(暴人), 이 '3폭' 시대에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외침이 주먹마디 가득하다. 이제 교육권, 생활지도권 등 교권도 확대하고 강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와 교사에 해당하지만 관계 개선도 하고,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집 반찬 사업이 거칠게 대립하는 교육 현장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란다.

社說

쌀값 겨우 회복했는데 정부가 폭락 조장하나

정부가 쌀 수확기를 코앞에 두고 공공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시장에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농협과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의 요구에 따라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t 을 방출하기로 하고 수요 파악을 거쳐 9월 22일까지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출 시기가 햅쌀 수확을 앞둔 시점이라 쌀값 하락을 자극할 것이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올 추석 상차림용 햅쌀(조생종) 출하가 9월 초로 예정돼 있고 전체 햅쌀의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 햅쌀도 9월 중순부터 수확기에 접어들어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정부의 방출 방침이 쌀 가격 오름세를 막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줬 쌀값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등한 농자재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쌀값도 적정가에 못 미치는데 가격 오름세가 형성되는 햅쌀 출하

시기에 비축미를 풀면 모처럼 안정세를 찾은 쌀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 원대로 최근 5년 평균 가격보다 3% 가량 높다. 올해 4월까지의 하락세를 보이다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농민들은 햅쌀 출하가 쌀값 상승세를 기대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농협의 요구라지만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발표는 시장의 혼란을 감안하지 않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1년 8월에다 수확기를 앞두고 공공비축미 8만 t 을 시장에 풀어 쌀값 폭락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 비축미 방출이 유료 드는 부족한 원료곡 문제는 곧 수확하는 조생종 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농민들은 적정 쌀값을 80kg 기준 22만 원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어설픈 정책으로 쌀값 폭락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34년 만의 '5·18 청문회' 철저히 준비해야

오는 10월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5·18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발굴과 계엄군의 무고한 시민 학살 및 비공식 지휘라인 확인,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설 등 조사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사격 발표 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찾기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일정 부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4년여 동안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는 1988~1989년 5공화국·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활동 마지막 연차인 올

해 1월 청문회 준비소위를 발족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 주체를 확정하지 못하는데 관련 증인과 참고인 접촉, 참여 여부 교섭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0월로 잡힌 5·18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5·18조사위는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열어 43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최종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에서 지행한 만행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34년 만에 어렵게 마련되는 막중한 5·18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되거나 무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5·18조사위 2기 활동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5·18 진상규명 활동이 한시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과거에는 악습 정도로 치부했던 '갑질'이 이제 폭력으로 취급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갑질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레나 등급을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말인 '갑(甲)'과 어떤 행위를 뜻하는 접미사 '-질'을 결합해 만든 용어다. 계약서상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당사자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대를 가리키는 일명 갑을(甲乙)관계에서 비롯됐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흔히 '갑질한다'라고 표현한다.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침을 받는 학생과의 지위 관계를 고려할 때 교육현장에서 갑질이라면 '교사 갑질' 정도가 있을 성실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한때 요즘 이와는 사뭇 다른 유형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 갑질'이 그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됐고, 임금과 스승, 부모를 동격으로 보고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군사부일체'를 외치던 시절과는 달라진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 군사정권과 경쟁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대에 교육을 받았던 1980년 대생이 현재 젊은 학부모의 주축이 되면서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학교에서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남다른 결의를 하고 있고, 저출산 영향으로 자식 하나를 소위 '금쪽이'로 키우는 이들이 늘면서 '선을 넘는'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은 새겨볼 만하다. '금쪽같은 내 새끼'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일말의 부정과 손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취약한 시민사회와 소비자 지상주의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두고 갑과 을을 논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이다. 교육현장은 어떤 아이라도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이를 키워내기 위해 교사와 부모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력의 장이다. 아이들 교육에 누가 갑(甲)이고 누가 을(乙)이라는 말인가. 강제와 불평등을 먹고 자라, 나쁜 의미의 '질'로 표현되는 이런 관계는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공교육을 살리는 골든 타임

오늘날 교권이 무너져도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다. 일부 학생은 공부에 지쳐서, 아니면 공부 싫어서 학교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보다 못해 깨우면 휴식권 침해로 고발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교사가 맞고 하소연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게 우리 공교육(公敎育)의 현주소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생활지도권을 무력화시키는 악성 민원과 고소가 난무하는 외에도 학교 정문 앞 '학생안전보호실'에 상주하는 지도자가 없는 현 교육현장에 대한 개편과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때 우리 교육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강한 처벌을 받고, 근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훈육의 기회도 있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는 어른들의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과 보호 아래 소정의 교육을 받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어느샌가 교사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고, 학부모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손님이 된 것이다. 악성 민원을 넣는 이들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당연히 학부모의 시중을 드는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지식 제공의 노무를 행하는 노무자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배려

심과 소통방법, 자가 치유력을 체감하게 하고 다양한 지성을 가르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인적 인프라의 뿌리를 설계해주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다.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미래가 없다. 어떻게 살아올린 교육인가. 우리가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면서 잘사는 것도 다 '교육의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부 잘못된 교육과 작별을 고하고,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새롭게 맞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진 교육을 모방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K타입 교육(K-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미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영위하는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인 공정·공공성이 두드러진 개인별 맞춤형, 문제해결 중심, 평생학습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체인이 필수적 핵심이다. 학생·교사·학교·학부모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다. 교육개혁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골든타임인 만큼 현 사태에 대한 모두의 울분이 반드시 교육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notic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quality journalism.